

데스크 시각

탕평의 리더십으로 국민대통합을



임동욱

서울취재부장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탕평'의 뜻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인사대탕평'을 통한 '국민대통합'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 핵 문제, 세계 경제 침체, 심화되는 양극화 등 국내외 정세도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탕평을 통한 국론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시점이라는 점도 그 배경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이어 다시 영남정권을 맞게 되는 호남 민심은 박근혜 당선인의 '탕평'의 의지가 국무위원 인선과 정책에서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능력 중심으로 내각 인선

원래 탕평은 중국 경전인 서경(書經)에서 나온 말로 싸움이나 시비, 논쟁 등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영조 때부터 본격화, 정조에서 만개했다. 영조의 탕평책은 노론과 소론의 온건파를 벙갈아 등용해 균형을 이루는 소극적 형태였다.

그러나 노론과 소론의 균형은 시간이 흐르면서 노론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게 되면서 탕평의 의미가 탈색됐다. 정조는 이러한 과정을 거울삼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보다 강력한 탕평책을 전개한다. 원칙을 가지고 훈련을 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을 막론하고 관리로 등용하는 의지를 실천한 것이다.

붕당이나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고 노론, 소론뿐만 아니라 서열(庶庶) 신분이라도 실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편향되지 않게 인재를 등용했다. 정조는 특히 왕위에 등극하고도 자신의 아버지(사도세자)를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나노로 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실행하지 않았다.

오늘의 우리 '오직 그 사람을 보아 어진 이를 등용하고 불초한 사람을 버릴 것'이라는 탕평책에 근거한 자신의 인사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침전에 특별히 탕평평생(蕩蕩平生室)이라는 액자를 달아놓고, 아침 저녁으로 눈여겨보며 나의 영원한 고훈으로 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량으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사를 중용하는 탕평으로 미래의 비전을 창출해야 한다.

박 당선인이 국무위원 인선에서 탕평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에 빠져있는 다수의 국민은 새로운 정부에 등을 돌릴 것이다. 국론을 모을 수 있는 동력이 정권 초반부터 상실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의 '고소영 내각'이 반면교사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대(大) 탕평책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모든 지역과 성별, 세대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등용해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꿈이자 소망"이라고 했다. 그의 소망은 의심할 것 없이 국민의 소망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인수위 윤창준 대변인 임명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탕평 인사를 기대했던 민심의 고개를 가로거리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들만의 탕평'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그칠 것으로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박 당선인의 탕평 내각 인선을 기대해 본다.

/tum@kwangju.co.kr

고 주장하고 있으나, 듣기에는 거북하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번 특별사면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데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민주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률을 무너뜨린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 선 이면 특별사면에 대한 특례"로 저야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청와대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면권은 분명 남용됐다. 최 전 위원장과 천회장 등 측근들은 형이 확정된 지 겨우 한 달 정도만 견디고 퇴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무책임 특사'에다 말입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사면은 없을 것이라 더이 대통령의 애초 다짐도 최측근인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의 특사조치로 해산됐다. 두 사람은 권력형 비리의 상징처럼 부끄렀던 인물들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 초심을 잊지 않았다

오늘 나로호 3차 발사, 성공 기원한다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가 30일 최종 발사일을 맞아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러시아족과의 계약에 따라 사설상 마지막 기회인 이번 3차 발사를 앞두고 지난해 수차 연기와 수리를 거듭한 터라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원이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다.

나로호 성공의 경제적 가치는 2조 3000억 원 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발사체 제작 및 운용 기술력은 과학기술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방, 우주과학산업, 관광산업 분야 등 업체로는 경제력을 지닌다. 정부가 이번 나로호 이름을 단 발사체로는 마지막 시도다. 나로호가 성공으로 밝힐 때마다 우리나라의 자기 땅에서,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우주클럽'에 세계 10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10대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수차례 기술적 개선을 거듭한 만큼 이번 나로호 발사는 기필코 성공해야 한다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안기고,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의 환호를 이끌어내길 다시 한번 기원한다.

無等鼓

중국 제환공(齊桓公)은 포숙아(鮑叔牙)의 천거를 받아들여 관중(管仲)을 재상으로 기용함으로써 춘추전국시대 최초의 폐자(霸者)가 됐다. 제환공은 관중과 협력해 제후들과 회맹(會盟),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여 국위를 높인 것은 물론 내정에서도 군사력을 강화하고 상업·수공업을 육성하여 국가를 부흥시켰다.

나중에 제갈량이 "나의 소원은 관중처럼 뛰어난 재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정도였지만, 제환공과 관중은 애초에 원수였던 사이다. 관중은 과거 제나라의 왕위를 둘러싸고 형제간 다툼이 벌어졌을 때 큰아들인 공자규를 위해 둘째아들이 제환공을 죽이려 했었다.

당시 관중은 제환공을 만나 "만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물러나는 척하며 활을 쏘았고, 화살에 맞은 제환공은 입으로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하지만, 실제로 화살은 제환공의 허리띠 휩에 맞았을 뿐으로, 제환공은 관중의 또 다른 화살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허를 물어뜯고 피를 뺏어 죽은 사능을 한 것뿐이었다.

/홍행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온펜칼럼



최영태

전남대 교수·역사학

민주당, 친노는 살리고 DJ맨은 더 키워야

로 봐도 무리가 없을 만큼 그 동질성이 강했다.

그러나 세력교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엿보인다. '정권교체'는 세력교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DJ정부 때는 보수에서 민주·개혁진영으로 대대적인 세력교체가 일어났어야 할 시기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DJP연대라는 태생적 한계에다가 IMF위기 극복이라는 당면 과제, 그리고 최초의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옛 세력을 대거 등용한 까닭이다.

심지어 민주개혁진영의 인사를 등용할 때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을 선호했다. 또 평균 연령도 높은 편에 속했다.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노무현 정부는 젊고 개혁적인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였다. DJ 정부의 노하우를 계승한데다가 구세력에 대한 부채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민주당에 친노 인사가 많고 친 DJ 인사가 적은 것은 두 정권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 및 두 대통령의 인재등용방식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선거는 이성적·논리적인 요소보다 감성적 요소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국민은 민주당의 인적구조의 불가피성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서 친노 중심의 현 정당 구조만을 인지한다. 불행한 것은 다수의 국민들이 노무현 정권은 목표와 비전은 좋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미숙 내지 무능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민주당과 친노는 어울려다보이니 상황을 현실로 수용해야만 한다. 그래야 국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당에서 친노의 흔적을 지우는 형태로 당을 개편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노무현 시대 및 그 정신은 민주당이 계승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며 마찬가지로 친노 역시 민주당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안 모색은 기존의 자신을 버리고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

온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온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개편



고재웅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장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했으나 많은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빙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법 제34조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빙본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소득 및 재산을 근거로 산출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두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는지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 1월부터 공적부조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자활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이 가능하도록 한 근로능력평가제도가 2012년 12월 1일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게 됐다.

근로능력평가는 조건부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상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판정을 통해 자활참여 확대 및 맞춤형 자활서비스 연계로 이어져 질병,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평가하여 기초생활수급에서의 탈출을 도모하고, 실질

여 근로능력평가 절차에 대한 문의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해당지사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공단은 전문인력에 의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통일성 및 형평성이 확보될 가능하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전국 단일체계의 통일적인 업무프로세스와 전문인력의 심사 수행으로 평가자간의 편차 최소화 및 복지정책의 적정지급과 유사대상자간 판정자에 대한 결과가 상이하여 생겼던 수급자의 불만과 제도의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 해결로 민원감소 및 제도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공단에서 제공하는 진단서 발급·동행서비스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편의성 증대와 저소득층의 자립 확대를 통한 정부의 능동적 복지실현에 기여하면서 국민 모두가 잘 살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에너지 제로 주택' 감면 등 인센티브 줘야

화석연료가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고 그 때문에 심각한 환경재앙이 경고된다는 오래되었다. 화석연료의 사용이 가장 큰 분야는 자동차이지만 여기에 빛지 않은 게 바로 전기분야이다.

이미 전기는 여름철에 블랙아웃을 한번 겪었고 겨울철에 지금도 번번이 블랙아웃을 걱정하며 조금이라도 춥기만 하면 비상대책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정부의 책무 아닌가 생각한다.

예를 들어 새로 짓는 집에 이런 설비를 갖출 경우 인센티브를 주거나, 주택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제로 주택은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해 외부 지원 없이 모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방식이다. 건축비가 기준에는 3.3m에 1000만 원 이상 들지만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 상업화가 가능해졌다. 고단열재와 태양열

진공관이 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이 주택 지하에는 90도로 가열된 물이 저장돼 있고 이 열을 이용해 한계에 고립되거나, 전력이 차단되더라도 최대 20일까지 난방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친환경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국민들에게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바란다. ▲김일락·보성군 문덕면 효동리

社說

'측근 특사' 강행한 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이명박 대통령이 들끓는 반대 여론에 불구하고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 위원장과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리"이며 반대 입장장을 거듭 밝혔고, 여야도 한목소리로 특사 강행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는데 거침없이 밀어붙인 것이다.

한마디로 한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불과한 특별사면은 분명 남용됐다.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은 형이 확정된 지 겨우 한 달 정도만 견디고 퇴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무책임 특사'에다 말입니다.

청와대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면권은 분명 남용됐다.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 등 측근들은 형이 확정된 지 겨우 한 달 정도만 견디고 퇴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무책임 특사'에다 말입니다.

명분도 실리도 살리지 못한 특사로는 거울을 강행한 이 대통령의 오기 보기에 민망할 정도다. 박근혜 당선인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특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늘 나로호 3차 발사, 성공 기원한다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가 30일 최종 발사일을 맞아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러시아족과의 계약에 따라 사설상 마지막 기회인 이번 3차 발사를 앞두고 지난해 수차 연기와 수리를 거듭한 터라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원이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다.

나로호 성공의 경제적 가치는 2조 3000억 원 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발사체 제작 및 운용 기술력은 과학기술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방, 우주과학산업, 관광산업 분야 등 업체로는 경제력을 지닌다. 정부가 이번 나로호 이름을 단 발사체로는 마지막 시도다. 나로호가 성공으로 밝힐 때마다 우리나라의 자기 땅에서,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우주클럽'에 세계 10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10대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수차례 기술적 개선을 거듭한 만큼 이번 나로호 발사는 기필코 성공해야 한다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안기고,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의 환호를 이끌어내길 다시 한번 기원한다.

無等鼓

제환공은 이 사건으로 관중에게 원한을 품었지만 나중에 관중의 경륜을 인정, 오히려 승승으로 예우하며 재상에 임명함으로써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냈다. 제환공처럼 자신의 적을 오히려 포용해 국가를 발전시킨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 1980년대 미국 부흥의 정점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후보 경쟁자였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제환공은 이전에 선거참모 제임스 베이커에게 1기 정부에선 비서실장, 2기 정부에선 재무장관을 맡겼다. 미국의 대통령을 이룬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은 1861년 취임 이후 경쟁자였던 윌리엄 슈어드, 새만 체이스, 에드워드 베이츠를 각각 국무, 재무, 법무장관에 앉혀 미국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다음달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